고등교육 정/책/소/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비율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지난 10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시 발표한 설치인가 대학 선정 기본방향에 따라 한 달 여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서울 고등법원 관할권역(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과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함
  - 위 배분은 인구 수, 지역 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설치인가 심사 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 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한편, 서울 외 4대 권역 간 입학정원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2008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 등 신청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2008년 9월에 최종 설치인가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 일정**

추진업무	일정
사실조사(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07.12.~'08.1.
예비선정 대학 결정 · 발표	'08.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08.9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09.3월

▼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

고등법원 소재지	지역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대구, 경북
부산	부산, 경남, 울산
광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2008학년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6,830명을 대상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이는 올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08학년도부터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 전문대를 졸업한 재직경력자들의 계속교육(전공심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1년 이하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어 대학 수준의 정규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2007.7.13.「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는 동 과정을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이번에 인가를 받은 대학은 내년 3월부터 동 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이르면 이 달 중순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될 예정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학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이번에 인가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 6,830명은 전문학사 입학정원의 2.87%에 해당하는 수준(법령상 최대 20%까지 가능)으로, 지난달 말 인가신청서 접수 결과 79개 전문대학 336개 학과(9,464명)가 신청을 하였으며, 각계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위원장: 서울대학교 나승일 교수)의 심사를 거쳐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가 인가를 받게 되었다.

※ 전문대학 현황('07년 기준): 148개 대학, 전문학사 입학정원 24만여 명

주요 인가기준

- 교육여건(적격요건)
  - 전임교원 확보율 : 학교 전체 48% 이상, 모집단위별 50% 이상
  - 전체교원 확보율 : 모집단위별 80% 이상
  - 교사 확보율 : 100% 이상
- 교육의 질적 수준 및 운영역량 등(심사단 평가)
  - 교육과정 운영계획(현장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강조)
  - 학교 전체의 전공심화과정 운영의지 및 지원계획 등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4년제 대학 편입 외에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 입학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되어 교육선택권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전문대 졸업 → 취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경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직업교육 이수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 연간 전문대학 졸업자 중 약 5만여 명 이상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4년제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편입, 학점은행제 등 활용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성공의 열쇠인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재직자들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 운영이 미흡한 학과에 대해서는 신규모집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이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교협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실시하기로

⊙ 지난 12월 7일 재경부 부총리, 교육부 부총리, 경제 5단체 CEO, 대교협 회장단이 참여하는 산학관 간담회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제1차 회의(2007. 5. 10)에 이어, 「대학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2차 산 · 학 · 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식 사무총장은 지난 제1차 산학관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에 대하여 그동안 대교협과 경제 5단체 등이 T/F를 구성하여 개발해 온 「산업계관점의 대학평가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대학교육과 기업 간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의 관점에서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9개 대학, 대학정보공시제 정보 시범 공개

⊙ 2008년 5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가한 9개 대학의 주요 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시범공시를 준비해 온 정보공시 시범대학들이 11월 30일부터 충원율, 교원확보율, 연구실적 등 주요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정보공시에 나선 시범대학은 9곳으로 경북대와 한국교원대, 건국대, 건양대, 서울산업대, 서울교대, 영진전문대학, 인하공업대학, 순천청암대학이다.

그동안 10개 시범대학은 학내 정보공시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 정보를 수집 · 검증하는 체제를 갖추고 전담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원 아래 총 5차례의 운영협의회에서 정보

공시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대학 현장에 적합성이 높은 정보공시모형을 개발하였다.
또 대학별 공시정보와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 등의 자료를 비교 · 확인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북대와 인하공전의 시연회를 거쳐 정보 공시 모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 시범운영 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대상 대학 400여 곳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공시모델을 설명하고 운영사례집을 작성 · 배포하는 등 대학정보공시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로스쿨 41개 대학 3,960명 신청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 마감한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은 총 41곳이며, 희망하는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총정원 2,000명의 두배 수준인 3,960명이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2008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2008년 9월 최종 설치인가한다.

대학교육 수준 보장 · 사립대 구조조정 촉진 발판 마련

⊙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설립 ·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연번	권역	대학 수	대학명	정원	특성화 분야	연번	권역	대학 수	대학명	정원	특성화 분야
1	서울 권역	24 (2,360)	건국대	100	부동산관련법	20			경기대	50	인권분야
2			경희대	120	글로벌 기업법무	21			단국대	80	IT정보미디어법
3			고려대	150	GPL(국제법무)	22			아주대	80	중소기업법무
4			국민대	80	금융법	23			인하대	100	물류법, 지적재산권
5			동국대	80	문화산업	24			강원대	80	환경
6			명지대	50	지적재산권법	25	대전 권역	6 (470)	충남대	120	지적재산권
7			서강대	80	기업법(세부특성화:금융법)	26			한남대	80	과학기술법
8			서울대	150	국제법무,공익인권,기업금융	27			선문대	80	국제관계 및 국제금융 · 보험
9			성균관대	150	기업법무	28			청주대	50	사회복지
10			성신여대	50	기업법무 여성전문가	29			충북대	80	과학기술법
11			숙명여대	60	아동·여성·가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복지	30			서남대	60	의료법률
12			숭실대	50	IT법, 교회와 법	31	광주 권역	5 (480)	전남대	150	공익인권법
13			서울시립대	100	조세법	32			조선대	100	문화법
14			연세대	150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지니스와 법 외료·과학기술과 법	33			원광대	80	의생명과학법
						34			전북대	100	동북아법
						35			제주대	50	국제법무
15			이화여대	150	생명의료법,젠더법	36	대구 권역	2 (270)	경북대	150	IT법
16			중앙대	120	문화법	37			영남대	120	공익 · 인권
17			한국외대	10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38	부산 권역	4 (380)	동아대	100	국제상거래법
18			한양대	150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상업법무, 공익 · 소수자인 권법무	39			부산대	150	금융 해운통상
						40			경상대	50	EU법
						41			영산대	80	기업법무
19			홍익대	80	미술·디자인 관련법	합계	41개교 3,960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된 내용 중 자체조정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 ·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원 설치 및 석 · 박사 학과 신설기준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는 대학원 및 학위과정의 학과 설치기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학설립 · 운영규정'에 명시된다.

또 대학의 학과 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 증설 또는 증원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대학설립 · 운영규정'이 정한 교원 · 교사 · 교지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사립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해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시켜 통 · 폐합하는 경우 교원 등의 기준은 별도로 적용받는다. 이밖에 대학이 총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단위간 정원을 조정하는 등 자체조정할 경우 대학은 자체조정 뒤 교원 등의 기준 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 행정구역이 다른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 · 폐합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특례기준은 동일한 행정구역의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 · 폐합할 때만 적용돼왔다.

이 밖에 전문대학원의 교원배치에 관한 법령도 정비된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원 교원배치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대학원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대학설립 · 운영규정'에 명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설립 · 운영규정' 개정이 학과나 학부 증설, 학생정원 증원 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개정내용을 내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 통계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 김신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이창호 통계청장은 2007년 11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본부에서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사회투자 및 인적자원개발 중시 시대에 맞게 교육인적자원 분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 · 지표의 확충 및 신뢰받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였다.

두 기관은 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과 연구 · 분석, 통계작성 기법 및 통계자료 활용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교육인적자원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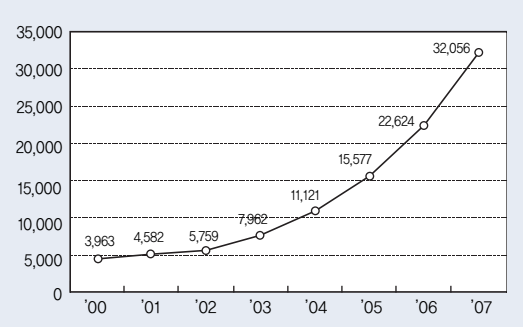
주요 통계협력 및 개발 분야

-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기초통계조사
-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도시가계조사 등 교육 관련 기초자료
- 성인의 평생학습 패널조사, 성인 문해률조사 등

교육인적자원부 '2007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 발표

⊙ 교수 1인당 학생 수, 도서관 예산 증가 등 교육여건이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으로 유학오는 외국인 학생 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2007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 7,962명에서 2006년 2만2,624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3만2,056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0.9%를 차지하였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 2007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72.1%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4.7%, 일본 3.9%, 몽골 2.8%로 아시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하여 다각적인 국제화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현재 전체 고등교육기관은 총 408곳으로 2005년 419개 교를 정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교육여건도 해마다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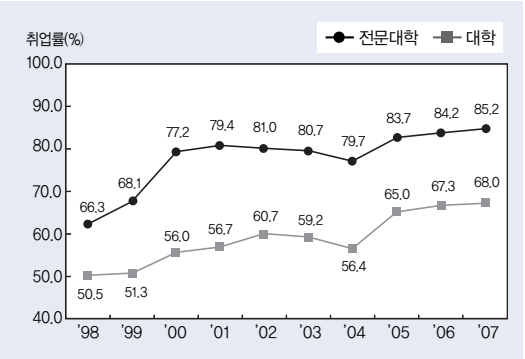
일반대학 기준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3년 32.6명에서 올해는 28.3명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도서관 예산은 학교당 평균 9억7421만 원에서 12억1638만 원으로 2억4217만 원이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그동안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각 진행하던 통계조사를 일원화한 것으로 앞으로 취업통계조사와 연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입부터 성과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는 자료집도 발간된다.

올해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지난 해보다 소폭 상승

⊙ 11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76.1%로, 지난해 75.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전문대학이 85.2%였고, 대학과 일반 대학원은 각각 68.0%, 81.7%였다. 정규직만을 따질 경우 전문대학 65.1%, 대학 48.7%, 일반 대학원 61.0% 등이다. 전체 정규직 취업률은 평균 65.1%로, 지난해 67.1%보다 2%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이번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376개 대학, 142개 일반 대학원 졸업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른 것이다.

대학 전공 중 취업이 잘 되는 곳은 간호학으로, 취업률이 94.4%에 달했고, 치의학(92.8%), 의학(91.6%), 약학(90.1%), 한의학(89.3%) 등 순이었다. 최근 의약계열 선호 현상은 이들 계열의 높은 취업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 간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취업률 변동 추이〉

〈2007년 취업통계 세부내역〉

(단위 : 명, %)

구분	취업 대상자	취업자	정규직취업자			비정규직취업자				자영업
			합계	정규직	대기 발령	합계	임시직	시간제	무급가족 종사자	
총계	512,492	390,180 (76.1)	290,907 (56.8)	281,663 (55.0)	9,244 (1.8)	90,470 (17.7)	60,749 (11.9)	26,633 (5.2)	3,088 (0.6)	8,803 (1.7)
전문대학	204,037	173,804 (85.2)	132,783 (65.1)	128,360 (62.9)	4,423 (2.2)	37,678 (18.5)	25,248 (12.4)	11,584 (5.7)	846 (0.4)	3,343 (1.6)
대학	247,424	168,254 (68.0)	120,618 (48.7)	117,052 (47.3)	3,566 (1.4)	44,333 (17.9)	28,644 (11.6)	13,608 (5.5)	2,081 (0.8)	3,303 (1.3)
교육대학	5,817	4,109 (70.6)	3,680 (63.3)	2,746 (47.2)	934 (16.1)	429 (7.4)	417 (7.2)	12 (0.2)	0 (0.0)	0 (0.0)
산업대학	25,350	19,714 (77.8)	15,701 (61.9)	15,541 (61.3)	160 (0.6)	3,299 (13.0)	2,425 (9.6)	737 (2.9)	137 (0.5)	714 (2.8)
각종 대학	241	109 (45.2)	48 (19.9)	48 (19.9)	0 (0.0)	57 (23.7)	57 (23.7)	0 (0.0)	0 (0.0)	4 (1.7)
일반대학원	29,623	24,190 (81.7)	18,077 (61.0)	17,916 (60.5)	161 (0.5)	4,674 (15.8)	3,958 (13.4)	692 (2.3)	24 (0.1)	1,439 (4.9)

선택한 직업이 전공과 동일한지 여부를 뜻하는 전공일치도는 전문대학 72.1%, 대학 68.6%, 일반 대학원 94.6% 등이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의약계열의 전공일치도가 9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예체능계열(81.2%), 공학계열(78.2%), 교육계열(76.7%) 등 순이다. 반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전공일치도는 각각 46.9%, 59.8%에 불과했다.

특히 이러한 낮은 전공일치도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학교육이 탄력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때문으로, 최근 심각한 고학력실업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77%로, OECD 평균 84%에 못미치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터키(76%)가 유일하다.

대학, 내년부터 보유기술 사업화 가능

⊙ 내년부터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세워 보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4일 기술지주회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기술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출자해 설립하는 회사로, 주식보유를 통해 자회사를 둘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뿐 아니라 출원 중인 권리, 정보, 노하우 등을 사업화할 수 있다. 또 기술출자만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채우기 힘들 경우에는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물이나 현금출자도 가능하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과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을 연구시설, 기자재 구입 · 운영 · 유지 · 보수 그리고 연구개발 기획 · 성과 · 평가 · 보상 등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금을 대학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 복무 중 학점인정을 위한 교육부 · 국방부 · 대학간 MOU 체결

⊙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2007년 11월 8일 군 대에서 강원대를 비롯한 12개 대학, 한국교육개발원, 군인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학 · 군 · 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체결 대학(12)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이공대학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군 복무 중 장병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군 복무 중에 이수한 교육훈련 과정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병사들의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4월까지 공동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군에서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은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6일 그동안 정기예금 등 '안정성' 위주로 금융기관에 예치 · 관리되던 사립대학의 적립금에 대하여 주식 등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다양한 수익증권(MMF,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어 대학 보유 적립금(6조5천122억 원) 중 50% 정도를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정기예금 대비 약 1천8백억 원 정도 추가 수익이 예상되어 그동안 등록금에 의존해 오던 사학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학에서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2분의 1로 제한하는 한편, 증권 투자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리스크가 최대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금번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정책은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되는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